

북한 체제의 변화와 전망

高 性 俊

- I. 김정일시대의 서막
- II.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체제
- III. 유훈통치의 정치경제학
- IV. 개방정책의 딜레마
- V. 김정일시대의 전망

I. 김정일시대의 서막

지난 해 7월 우리는 김일성 사망으로 분단국가인 남북한간에 획기적 변화가 일고 북한에 큰 변화가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위기 현상을 극복하고자 개혁의 길을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반세기 가깝게 북한을 통치해 온 김일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없는 김일성시대가 '유훈통치'라는 명분아래 지속되고 있다. 김일성 사후 1년의 결과는 그동안 가졌던 우리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

한의 변화를 「김일성의 사망=북한체제의 붕괴」라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 일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에는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새 시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일체제의 수립·등장과 대외적 관계에 있어 획기적 변화인 대미관계 개선이다. 전통적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의 관계변화는 미국이 북한과 제네바에서 핵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이는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함께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북한은 앞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체제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체제

해방이후 소련군의 지도와 통제 아래 북한지역에서 공산당에 의한 정권장악이 이루어졌다. 소련, 중국, 월남의 경우와 같이 내전과정을 통한 자주적인 공산혁명과는 그 유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북한의 공산당정권은 전후 소련의 점령지역에 세워진 소련의 위성정권이었으며 따라서 북한은 정권 초기에는 그들의 정치이데올로기로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맑스-레닌주의를 수용하였을 뿐이다.¹⁾ 그런데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에서 스탈린격하 운동이 심화되던 1955년부터 독자적

1) 소련 점령군에 의한 공산화를 「소련군용열차에 실려 온 정권」(Soviet baggage-train regime)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폴란드, 동독 등이 유사한 예다. 물론 북한의 공산화를 유고의 경우처럼 토착 공산주의 세력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모색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 이데올로기의 정립을 시도하게 되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의 체계화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 주체사상을 절대화·신비화하였다.

북한이 소련군의 후원과 지도하에 공산화를 구축해 나간 초기단계에서는 소련의 정치이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회의(1945년 12월 17~18)에서 당책임비서로 선출된 김일성은 1946년 9월 9일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에서 행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총결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 보고에서 그는 해방된 조선의 사회발전단계를 사회주의 단계가 아니라 민주주의 단계라고 규정하면서도 맑스-레닌주의적 사회발전 법칙의 궤도 위에서, 그 것발 밑에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고한데서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²⁾

그러나 북한은 소련의 공식이데올로기의 틀 아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다 보니 북한지역만이 갖고 있는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며, 소련의 경우와는 다른 경험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김일성은 1951년에서 1955년 4월 사이에 북한의 실정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북한에서 '주체'의 확립문제를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 선동원 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비롯된다.³⁾ 그동안 소련에 대하여 충성을 바쳤던 김일성이 당이데올로기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주체'의 확립을 거론하게 된 것은 1955년 이후 전개된 내외의 도전으로부터 자기자신의 권력과 정

2) 김일성선집 제1권(평양, 1954), pp.269-305; 김준엽 외(편), 「북한연구자료 I」(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p.136.

3) 김일성선집 4.(1960), pp.337-354.

책노선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즉, 1953년의 '스탈린'사망이후 노정된 소련파와의 당권투쟁사업에서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의 옹호·강화하려는 전략상의 요청에 따라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일성의 통치노선에 바탕이 되어온 스탈린주의는 스탈린 사망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격하의 길을 걷게 되고, 이는 그동안 스탈린의 후광을 업고 있던 김일성에 대해 소련파로 하여금 김일성의 권력과 정책노선에 도전할 하게 했다. 따라서 김일성은 소련파를 견제하고 당내 리더십을 강화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상적 입장의 확립이 절대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소련을 믿고 자기의 독재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당의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는 '반당 종파분자'요, 이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소련의 것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주체도, 창조성도 없는 분자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1955년 12월 28일 그는 당내에서 주체가 없이 남의 것을 교조적으로 이용하는 소련파를 비판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려는 목적의식에서, '주체'의 확립이라는 사상적 명분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당내 지배이념의 의미를 지칭하는 뜻으로서 주체사상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1967년 12월 6일 최고인민회의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였다. 김일성은 "국가의 모든 활동분야에서 자주·독립·자위의 노선을 철저히 구현하자"는 제하의 연설에서 주체사상을 더욱 구체화하여, 이에 1970년 11월의 제 5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 내세웠다. 그리고 1972년 12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본래의 맑스-레닌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제외되고 주체사상이 인민과 국가의 기본강령이 되었다.

1972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주체사상을 이론적이며 체계화된 사상으

로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 전개되었다. 주체사상이론가인 황장엽은 1972년 4월 3일 '조선사회과학자대회'에서 행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 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주체사상의 과학화를 강조한데 이어 김일성은 1972년 9월 17일 일본 마이니찌 신문기자들이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는 동시에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라는 위상의 변화로 시도되기 시작했다.⁴⁾ '김일성주의'화는 주체사상을 그동안 지도원리로 삼아온 맑스-레닌주의와 동격 내지는 상위의 이데올로기로 공식화하려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의 경우 모택동 생존시 자신의 사상을 주의로 격상시키려 해본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특이할 만한 일이다. 아무튼 주체사상의 체계화작업은 김일성 사후 혹은 퇴진 후 예상되는 격하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의 사상과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의 일환에서 그리고 김일성의 권력승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의 이론적 권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전개되었다.

김일성이 1971년 6월에 개최된 사로청 제6차 대회에서 처음 후계자 문제를 거론한 이후, 당에서의 김정일의 지위는 빠른 속도로 상향조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는 카리스마도 없고 혁명업적도 없어 정통성의 결여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하나로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라는 위상변화를 통한 김정일의 이데올로기

4) 1973년부터 통일혁명당이나 재일 조총련에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1974년 10월 동경에서 열린 주체과학토론 전국 집회에서 주체사상 대신 「김일성주의」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갑철 외,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문우사, 1988)와 이종석,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등이 있다.

적 업적을 부각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김정일이 '영구불변의 진리'인 주체사상을 구현시키고 발전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정통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날까지도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음을 선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사상이 내지는 이론가의 위상을 부각시켜 김정일의 권력승계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일당 독재국가에서 이데올로기의 최종적 해석권은 독재자 자신이 장악하는 경우와 같이, 1980년 10월 당 제 6차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정통적 해석권을 장악해 왔다. 이 대회에서는 당규약 전문을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개정하여 맑스-레닌주의로부터 완전독립함을 선언한다. 그리하여 1982년 3월에 그는 주체사상을 체계적이고 이론적 사상체계의 틀로 제시한 글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게 된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이 글이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연구, 선전과 교양을 위한 참된 교과서,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기념비적 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불멸의 전투적 기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정일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이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곧 ‘김일성주의’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이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체계화(김일성주의화)와 관련하여 “조선 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스’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년 10월), “혁명적 수령관”(1982년 10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1983년 5월)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후 김정일은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과 소련에서 일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가 북한내부에 스며들어 체제를 동요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노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기하였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행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시작했는데, 김정일은 그동안 북한의 강력한 이념적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의 체제개혁의 여파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였다. 즉 두 공산국가의 개혁의 배경에는 현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국, 소련과는 다른 독자적 사회주의 건설의 이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축으로 재구성하여 이를 극복하는 이데올로기적 처방을 시도하게 되었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 최고의 뇌수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처럼 주체사상을 재정의하여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에 대한 대중적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여 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후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1987년)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에 이르는 담화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주체사상과 이에 토대를 둔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Ⅲ. 유훈통치의 정치경제학

김일성 사후 북한은 '유훈통치'라는 명분으로 김일성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직까지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되어 20여년 동안 권력승계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총비서나 국가주석직에 취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케 하고 있다. 즉 향후 북한은 '변화'보다는 종래의 노선을 견지하는 '지속'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유훈통치'와 '권력의 공식승계 지연'등은 '큰 변화'를 위한 '작은 포석'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지난 1년동안 북한 내외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을 열거해 보자.

-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 1994년 9월 7일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제정.
- 1994년 10월 21일 핵문제에 관한 북미 제네바협의.
- 1994년 11월 4일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발표.
- 1994년 12월 28일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제정.
- 1995년 1월 1일 신년사(당보·군보·청년보 명의 공동사설)를 통해 3대 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방침은 계속 추진할 것을 천명.
- 1995년 1월 12일 북한의 유엔대사 박길언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코카콜라 본사 방문.
- 1995년 1월 20일 「북·미 기본합의문」에 근거한 미

국의 대북한 무역 규제 완화조치를 위한 4개항의 조치를 발표함. (통신 및 정보, 금융거래, 무역,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1995년 2월 14일~18일

북한은 GM, MCL, 종합무역회사 스텐턴그룹, US워싱턴뱅크 등을 포함한 11개사로 구성된 미국기업 대표단을 초청하여 나진·선봉지구의 통신망 설치등 각분야의 경험 가능성 타진.

○1995년 2월 22일 대외경제 계약법 제정.

○1995년 3월 28일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 재개에 합의

○1995년 4월 6일 보험법 제정.

○1995년 4월 28일~29일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제」 개최.

○1995년 5월 26일 북한의 이성록 국제무역촉진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 일본의 쌀 잉여분 대여요청 (한국 쌀도 받을 용의 있음을 표명).

○1995년 6월 12일 북·미간에 경수로 협상타결.

○1995년 6월 19일 김정일은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라는 논문발표.

○1995년 8월 25일 유엔人道局(DNA)에 수해구호요청.

지난 1년동안의 주요 사건들의 나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대외 개방을 향한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난의 해소를 위해 지난 91년 12월에 설정한 나진-선봉지역 경제특구(자유무역지대)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외자유치관련법도 계속 정비했고,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위시한 외국기업 심지어 대결상대인 남한의 기업까지도 초청해 왔다.

둘째로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워 수출생산 중대를 도모하여 외국과의 교역을 확대·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92년이래 추진해온 '신무역체계'의 도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⁵⁾ 신무역체계는 생산자가 대외무역까지도 직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로서, 위원회, 부, 도 등에 생산을 관장하는 행정기관까지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무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대외무역 담당기구를 재정비하여 대외무역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주적으로 여겨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왔으며, 일본 또한 북한체제의 존립근거가 되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이후 계속해서 적대국가로 여겨왔다. 그런데 어제까지 적이었으며 자본주의 대표국가이기도 한 두 국가와 관계개선을 통해 친구가 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이것을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결정이나 일순간의 정책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문제는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북한 또한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김일성 생전에 그 틀이 잡혀 있었다. 김일성은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대외개방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80년대 초에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으로 제

5) 김영수, "김일성 사후의 북한경제".

시된 것이 중국의 것을 많이 모방한 합영법의 채택(84년)이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래 악화된 사회주의권과의 경제상대는 80년대 말에서 90년에 들어서면서 변혁으로 인해 북한의 입장으로는 파트너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아니고는 북한경제의 회생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중국이 취했던 경제특구방식 이른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89년 6월의 천안문사태를 중국의 무분별적인 개방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으로 보고, 통제와 선택적 개방 즉 '방충망식' 개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 합영 기업 및 외국인 기업 등 모든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 외국기업들이 이 지역에 진출할 경우 북한 경제는 세계경제와 점차 접목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경우처럼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방충망식 개방'이 효과를 거두려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특히 대미 및 대일관계 개선은 세계경제사회에서 일종의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전제 없이는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관 및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이 어렵다.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관이나 외국기업들은 미국정부의 승인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차관공여나 투자를 꺼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진전은 보상금 지급문제까지 걸려 있는 일본과의 수교협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베트남의 경우, 개방정책을 채택했으나,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국교정상화 및 금수해제방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외국인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상기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소련붕괴 이후 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한 대미접근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핵카드'였다.⁶⁾ 국제

6) 북한 핵문제와 대북경수로지원에 관한 논의는 「통일경제」 제8호 (1995. 8),

사회로부터의 체제인정과 경제난 해결의 기본 조건마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한 것이 '핵카드'를 이용한 대미관계개선이었다. 이 두 문제는 북한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에, '핵카드'를 통한 대미관계개선은 생존전략이요, 생명보험과 같은 것이었다. 결국 핵카드는 제네바에서 미국과 핵합의를 끌어내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는 정책을 발표케 했다. 또한 일본과의 수교협상도 재개되었다. 그러나 핵이 갖는 공포요소는 상대적으로 북한 지역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 외국 기업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역작용도 가져왔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이미 80년 말 내지는 90년초부터 대외협력이라는 개방전략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경제난도 생존확보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서 경제특구식 경제발전전략이 단시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북한의 당국자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볼 때, 중·장기적 안목에서 개방정책은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점차적으로 경제체제의 개혁문제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994년 11월 1일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한 바 있다. 논문의 전반적인 기조는 사회주의체제수호와 이념재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행간을 검토할 때 개방정책과 관련하여 또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독특한 인간론에 의거하여 경제발전과 개방정책이 사회주의적 인간형과 양립할 수 있다고 암시를 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간이 물질적이며 경제적 여건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유물사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의 자율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에 대

한 주체적 해석은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갖는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즉 생산력이 발전하고 경제적 재화가 축적되어도 인간은 황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주의 이념을 계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제기하고 있다. 소위 '정치적 생명체'론을 내세워 인간을 개인적 이익보다 사회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물질적 삶의 개선이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여기에 사상교화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김정일은 사상개조사업을 강조하면서 특히 우선적인 오염대상일 수 있는 당 관료집단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일은 당료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척결을 반복해서 경고하면서 당이 어머니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995년 6월 19일 발표한 김정일의 논문,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도 94년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 역시 사회주의체제고수를 비장하게 다짐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사회주의전선의 와해가 유물사관의 명제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사상사업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건설과 더불어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방심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나, 인간은 물질적 여건에 의해 완전히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성사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의 유습과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했듯이 오늘날 외부로부터 침습해 오는 자본주의와 자유화의 물결에 맞서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능히 객관적인 여건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세계개조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며, 그리하여 당은 사상교육의 형식화를 불식시키고 과거 항일유격 당시 사상투쟁의 전통을 재건해야 한다고 김정일은 주장한다.

김정일의 사상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교시는 한편으로 완고한 체제 사수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외개방에 즈음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변화의 물결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V. 개방정책의 딜레마

현 북한의 경제는 정권출발 이래 최악의 사태라고 얘기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본 무역진흥회(JETRO)발표에 의하면 1994년도의 북한의 수출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9.7억 달러, 수입은 22.9%가 줄어든 12.5억 달러에 그쳤다. 에너지, 식량 등 경제운영의 기초부문도 절대 부족한 형편으로 경제전반의 침체가 90년이래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의 성공은 북한체제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김정일에게는 새 시대에 필요한 통치자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⁷⁾

북한의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나진-선봉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아직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가시적인 단계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직도 북한-미국간에 연락 사무소가 개설돼 있지 않다. 일본과의 수교협상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일본과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는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7) 북한경제의 현황과 김일성 사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서재진, "김정일 정권의 경제정책 전망", 「통일경제」 제4호 (1985. 4), pp.45-47 부분과 오병훈, "김정일체제의 대외경제정책 전망", 상계서 pp.62-70이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진전은 경제난과 함께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외교적 고립탈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한이 나머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외적 바탕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서 비롯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외적 관계의 확대는 계속 약화되어온 북한의 국제혁명역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⁸⁾

또 하나, 북한의 개방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은 남한과의 적대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이 남북대화의 재개와 진전을 관계개선의 여건조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대내적 측면에서도 대남적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남한과의 관계진전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와해시키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대외관계와 대남관계를 북한에 유리하도록 전개해 나가는 과제 못지않게 김정일이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가 권력체제의 재구성이다. 김일성 사망 직후 과연 김정일어로의 권력승계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우세였다. 그후 공식적 승계가 지연되면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도 했으나, 공식적 승계와 관계없이 현재까지 김정일이 최고 권력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당분간 큰 이상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전후 혁명1세대 내지 원로들의 사망이나 퇴진의 공백을 메워 온 혁명2세대와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와의 조화가 하나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또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식 홍·전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고, 김일성때부터 권력의 주변에 포진해 온 친인척들의 위상문제도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공식화하는 과정에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8)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시하지 말고 먼저 일본과의 수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서대숙, 「북한의 외교정책과 일본」, 『통일경제』 제4호 (1985. 4). pp.72-84.

현재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도 항일투쟁의 업적도, 한국전쟁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보여준 리더쉽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북한주민들로부터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의 향상과 주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삶의 의욕을 심어 주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방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성공했기에 외국의 투자유치가 용이했고 현 지도층에 대한 지지도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한체제의 사회적 결집도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할 때는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으로 온 귀순자들의 지적처럼 북한체제가 밑으로부터 상당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것은 곧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시장경제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러려면,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사회주의는 우월하다”는 명제와 배치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V. 김정일시대의 전망

김일성 사후 1년동안의 북한은 한마디로 김정일시대의 등장이요, 개방주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새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한 김정일의 북한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인가? 대체로 그 방향은 중국식 모델에 가까울 것이 아닌가 한다.⁹⁾ 우선, 중국은 북한에 있어 가장

9) 북한이 중국식 개혁의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은 다음의 글을 볼 것. 이상우, “레닌주의의 이상과 현실: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서강대 동아연구소와 국립대만정치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한국전쟁기간부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온 동맹국가이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에 대변혁이 일어나 북한이 경제·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을 때도 중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와 수교를 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점차 줄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국가이익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이 위기에 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의 개방정책을 사회주의 본질에 대한 훼손으로 보고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6월에 걸쳐 북한대표단이 상해와 심천경제특구를 방문했으며, 중국의 개방에 대해 과거와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개방정책이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수용하지만 본질에서는 사회주의를 견지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개방이 야기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안전장치를 강구한 중국식 개방로선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개방전략추진도 중국의 경제특구를 원용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중국의 연안개발 방식을 본받아 신의주, 금강산, 남길지역 등 연안 몇개 지역을 경제특구화하여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당분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체제의 전망을 대내정책, 대외정책, 그리고 대남정책 그리고 반대세력의 부상가능성 등으로 나누어 예측해 보고자 한다.

1. 대내정책

그동안 공식승계가 이루어져 온 김정일체제의 출범이 노동당 창건

50주년인 10월 10일에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이 겸직했던 주식과 당총비서직을 모두 장악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주석직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여지가 많다고 본다. 그럼에도 설령 김정일이 당총비서직과 국방위원장만 맡는다 해도 집중화된 그의 권력행사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아버이 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이다”는 구호에서 보듯이 그는 이미 수령의 지위를 계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금년 여름에 발생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던 유엔에 대한 수재구호요청이 그것이다. 북한측 주장으로는 폭우로 인해 약 5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북한에 살다온 귀순자들은 그 피해가 훨씬 심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의 실정이 어떠한 간에 자연적 재해가 북한정치 일정에 미친 결과는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북한체제의 변화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의 하나로 등장하리라 예상된다.¹⁰⁾

경제난을 선택적 개방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리라 본다. 북한은 중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의 개방은 다른 지역으로서의 과급효과가 대단히 클 수가 있다. 따라서 개방은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아주 신중하게 지역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처럼 소유제도의 개혁이나 가시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변화를 짧은 시일내에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대외정책

김정일은 북한이 겪고 있는 외교적 수세와 경제난을 벗어나는 길은

10)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가중될 홍수피해는 향후 북한체제의 존속 내지는 변화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체제 내지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문제는 정치적 이유 보다는 바로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에 달려 있다.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뿐임을 알고 있어 이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미국이야말로 정치적·외교적·안보적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새 시대를 열어 나가려는 북한에게 결정적인 열쇠라고 간주해 대미관계개선을 북한외교의 기본 축으로 잡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일본과의 수교협상도 진행시켜 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체제가 위기에 처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외교환경의 최악의 상태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3. 대남정책

북한은 여전히 대남정책의 기초를 체제경쟁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남한과의 국력 차가 심한 현실에서 '남조선 해방'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남한 정부와 협력보다는 남한 정부와 국민사이에 분열을 촉진하는 쪽에 미련을 두고 있다. 한편 비정부적 차원에서 북한경제 재건에 남한의 경제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경분리 태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반대세력의 부상가능성

북한도 구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처럼 반체제 세력이 있어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가? 천안문사태와 같은 평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관으로 평양에 주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엘리트수준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처형됐거나 격리생활을 하고 있다. 일반사람들은 교화와 강제력에 의해 체제에 반기를 드는 정치적 저항력은 완전히 고갈됐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도 공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전문지식인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분화에다 유학경험이 있는 사람들, 현재의 유학생, 외국에 근무했던 외교관, 북송동포 등이 가세하여 점차 북한체제의 반대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중국의 천안문사태를 보면 이미 중국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외부세력이 있었으며, 홍콩, 대만, 미국 등이 피신처 내지는 여론화의 수단처가 됐으며, 사상해방으로 인해 모택동 사상에 대한 부분적 비판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현실은 반대세력의 부상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만큼 외부지원세력도, 피난처도, 주체사상을 대체할 이데올로기도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